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 및 기관들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참여기업,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탄소배출권의 현황과 전망, 비아이알 편집부

1) 정부의 역할

가. 참여범위 확대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기업 및 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비영리단체, 개인, 국제행사 등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보·교육,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KCER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자발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산은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인식수준은 76%로 높은 편이나, 이 중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은 26%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기업들이 탄소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에 앞서 기업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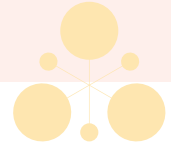
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업종별로 참여목적은 어떻게 상이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참여목적은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이므로 나타난 반면, 관심은 있으나 실행계획은 없는 기업의 참여목적은 향후 감축의무 대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철금속, 재생용 가공원료,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의 업종은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이, 철강, 구제조,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향후 감축의무 대비가 주요 참여목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업종 등의 참여목적은 배출권 거래를 향후 신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설문결과가 보여주듯이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과 아직 실행계획이 없는 기업의 참여목적도 다르고 업종별로도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점을 고려하여 기업참여도 제고전략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불참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참사유가 관련 정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홍보 및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일부 기업 및 기관들이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어도 이를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UK ETS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의 홍보 및 교육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경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간헐적으로 주최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에 대한 참여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참여자들이 배출권 거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업계의 협회 등을 통해 기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개인, 비영리단체 등의 참여는 기업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이미지까지 고려하는 추세이고 환경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도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중 개인의 경우 본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용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시장은 개인이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배출권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인으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달성과 개인의 참여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지원하는 입장이므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대중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비영리단체에게는 자

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시 KCER 거래를 포함시키는 것도 참여범위 확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CER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소 개설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 시장참가들에게 배출권 거래 경험 제공 등 자발적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는 거래만을 위한 별도의 탄소배출권 KCER 거래소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KCER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합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FIFA가 2006년 월드컵 개최시 배출권을 구매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2012년 여수 EXPO,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KCER 등의 배출권 구매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국내 자발적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무형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응답하는 등 아직까지 자금측면의 인센티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탄소 감축사

업 자금지원에 있어 현재의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 및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첫째, 현재의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JVETS와 UK ETS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했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과연 보조금 지원 없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정부는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선수금의 개념이 아닌 실적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② 둘째, 기존의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분인 에너지절약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에너지절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다양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탄소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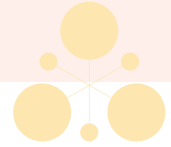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

업은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본 자금은 긴 대출기간과 낮은 금리로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시 기존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참여기업의 자금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보다는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기업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이며, UK ETS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참여포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다양한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배출량이 높고 이로 인해 다량의 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에 따라 금액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탄소 감축사업을 포괄하는 탄소 감축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와 홍보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때 기금이란 2007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조성한 '한국사모 탄소 특별자산 1호(이하 국내 1호 탄소펀드)'와는 다른 성격의 순수 정부주도의 공공기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금조성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단 기금명칭에 탄소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본 기금이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만 인센티브 제공을 국한하지 말고 은행, 증권회사 등 초기 자발적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Market maker(투자전문기관)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Market maker의 주 참여목적은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실현인 만큼 정부는 이들에게 KCER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탄소저감인증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인증을 획득한 유럽기업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탄소 저감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자발적 탄소시장도 더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배출권의 품질 신뢰성 제고 및 거래채널 확보

정부가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과 발생한 배출권의 거래채널을 확보하여 참여기업이 배출권 해외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감축실적이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야만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성이 보장되어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 중 CER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 배출권(KCER)을 CCX 등 해외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판매할 계획인데, 이때에도 KCER에 대한 국제적 인증은 필수적이며, 국내 거래시장과 해외 거래시장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KCER을 위한 표준절차 개발 또는

국제 표준절차 도입, 해외 인증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성한 KCER이 향후 해외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업, 컨설팅사,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KCER을 위한 표준절차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표준절차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축사업에 대해 별도 인증사의 검증을 받는 것도 국제 표준 절차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표준절차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제 표준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KCER 판매에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 비중을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표준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자발적 감축사업 개발자의 경우 자발적 배출권(VER)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감축사업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설정한 표준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기업의 표준절차는 KCER 해당 온실가스 감축이 영구적, 추가적인지, 정확하게 측량되었는지,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권 인증 및 해외 판매를 위해 타겟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발적 탄소 감축사업을 위한 다수의 표준절차가 국제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데, 이중 향후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표준절차는 Voluntary Carbon Standard(VCS)이다. VCS는 자국 내 환경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되

는 기술, 사업유형 등에 대해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cosystem Marketplace에 조사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중 약 40%가 VCS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앞으로 자발적 시장에서 VCS의 도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VCS를 도입을 통해 KCER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KCER의 주요 판매루트로 고려하고 있는 CCX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표준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CCX에서 배출권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JVETS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해외 탄소시장과의 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 배출권 거래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인 CCX와의 시스템 연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CCX는 향후 미국의 정식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의 ECX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 미국·유럽시장 진출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시간 교차 거래를 추진중이어서 세계 탄소시장에서 CCX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 최소한의 규제 도입

우리나라도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 70%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기업들은 만약에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에게 의무감축량을 할당할 후 목표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탄소배출

량에 따른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시 JVETS, UK ETS의 사례와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참조하여 어느 수준, 어떤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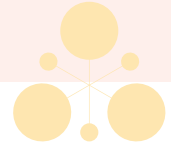
자발적 탄소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규제의 의미란 컴플라이언스 시장으로의 참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유형, 진행절차,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뜻하며, 자발적 시장 혹은 자발적 감축방안이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JVETS, UK ETS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두어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기업들의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JVETS와 UKETS는 각각 다른 성격의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는데, JVETS는 참여기업이 목표달성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만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반면, UK ETS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참여기업에 대해 벌금, 과세 등을 부과하는 등 JVETS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규제 장치 모두 기업의 참여도 제고 측면에서 완벽한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각 규제에 대한 참여기업의 반응이 매우 상이했다는 것이다.

먼저 JVETS는 규제의 강도가 너무 약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참여기업 중 일부는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보조금만을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중도에 참여를 포기해버린 사례가 있다.

반면에 UK ETS는 강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인데, 영국의 기업들이 '감축목표 실패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UK ETS로의 주요 불참요인 중 하나로 응답하는 등 벌금, 과세 부과 등이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의 역할

가. 정부정책에 적극적 동참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 시장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탄소시장 진출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크게 사내 공감대 형성, 저탄소 전략 수립,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UK ETS가 자발적 방안이기 때문에 사내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워 불참한 일부 기업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의무가 없는 만큼 영국보다 참여도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내부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진출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임직원들은 탄소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규모가 큰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작게는 기업을 위해서 크게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저탄소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배출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탄소전략이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어떤 방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뜻하며,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배출권을 구매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기업 내부적으로 노후가 없는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거나 해외 유사업종 중 성공적으로 배출권 사업을 진행한 기업의 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사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이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모의 배출권 거래제, 국내 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직원들이 지식 및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자체적인 준비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에 대비하여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될 때 시장 선점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직원들이 지식 및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자체적인 준비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에 대비하여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될 때 시장 선점 우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배출권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의 참여 유도

기업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배출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사의 직원까지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배출권 관련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유럽, 미국 등의 기업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상쇄용으로 외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한 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정유회사인 BP의 예를 들 수 있다.

BP는 호주에서 Global Choi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사의 Ultimate 등급 휘발유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당해 휘발유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BP가 상쇄함으로써 고객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업은 자사에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고객에게 홍보하고 직원의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매출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위의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벤처정신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벤처정신이 강한 미국의 경우 현재 다양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Alliance(TIST)와 TerraPass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TIST는 동부 아프리카와 인도의 농부들로부터 구입한 배출권을 eBay를 통해 개인들에게 톤당 20달러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TerraPass는 재생에너지사업 등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개인들의 자가용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도록 톤당 8-11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들은 자신의 배출권 상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려는 개인들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판매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기관들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고 평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그 외 부수적인 혜택을, 개인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win-win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개발을 통하여 이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역할

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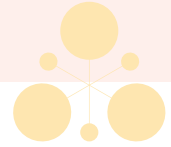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자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자금이 유입되어야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위한 자금공여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각화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자금지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기업대출, 감축사업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혁신적 배출권사업을 시행하는 벤처에 대한 벤처 캐피탈, 공모펀드 조성 및 일반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전통적인 자금지원방식인 기업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기업 및 감축사업에 대해 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투자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혁신적 배출권 사업을 시행하는 벤처에 대한 벤처 캐피탈은 당해 벤처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자금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공모펀드 조성 및 일



반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양한 자발적 배출권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자발적 시장으로 개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과 투자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은 앞에 열거된 방식의 자금지원을 통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자 및 투자수익, 배출권 확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단 자발적 탄소시장 내 배출권 관련 사업은 컴플라이언스 시장보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KCER 등록 및 보관서비스 제공

KCER의 국내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KCER이 다른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 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으로서의 KCER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등록 및 보관 서비스(registrar and custody) 제공을 통해 KCER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등록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Bank of New York이 유일하다.

Bank of New York은 2006년 6월 VCS를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인 Voluntary Carbon Unit(VCU)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글로벌 등록 및 보관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본 시스템은 VCU를 거래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은행내 기

업신탁부를 통해 VCU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배출권은 중복계산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시리얼(serial)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세계적인 탄소펀드 중 하나인 영국의 Cheyne Carbon Fund 등의 탄소펀드들이 Bank of New York에 배출권을 보관하는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Bank of New York의 사례는 금융기관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등록 및 보관서비스는 자발적 탄소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배출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서로에게 이익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Bank of New York의 사례를 참고하여 KCER에 대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KCER 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신규수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